

민선9기 도정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모색

전북자치도 · 전북연구원 · 전북테크노파크, 정책 토론회 28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9기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오는 28일 오후 3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민선9기 도정 재생에너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9기 도정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도민과 공유하고, 전문가와 도민이 함께 정책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

지사를 비롯해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회원과 에너지 분야 전문가, 재생에너지 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주제발표와 라운드테이블 정책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가 '새 도정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과 과제'를 주제로 민선9기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가 '전북 에너지 미래의 설계', 전영환 전홍익대학교 교수가 RE100 달성을 위한 송전망 체계', 위진 한국해상풍력

대표이사가 '전북 서남권 2.4GW 해상 풍력 집적화단지 추진현안과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2부에서는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구원, 시민사회 및 에너지전환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정책토론을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계통 보강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주민참여와 소득창출 모델 등을 중심으로 민선9기 재생에너지 정책이 지역산업

과 도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중심의 정책 논의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전북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직접 듣고 의견을 나누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히 발전설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민선9기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도민과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신용보증재단, 청렴·윤리경영 성과 입증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2025 전환 심사 통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부패방지경영 체계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은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2025' 표준전환 및 정기 사후심

사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반부패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기관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차단하는 한편, 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를 평가한다.

전북신보는 지난해 8월 ISO 37001 국제인증을 처음 획득한 데 이어 이번 심사에서 최신 개정판인 ISO 37001:2025 표준전환 심사와 사후관리심사의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RPA(프로세스 자동화) 기반 상시·종합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전 부점 청렴리더 18명을 운영하는 등 조직

내 부패방지 문화를 확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인식조사의 높은 응답률 등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전북신보는 기본재산 관리와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채권 관리 등 주요 업무 전반에서 240여 건의 부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고 있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계약 운영, 온·오프라인 클린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며 부패방지과 청렴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 일손 줄이는 ‘연무·연막’ 농약 사용 제도화 속도 낸다

농촌진흥청이 시설재배 농가의 농약 살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무·연막 방식의 농약 사용을 제도화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연무(상온연무)와 연막(가열연무) 방식에 적합한 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11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무와 연막은 농약을 아주 작은 입자의 안개나 연기 형태로 시설 내부에 퍼뜨리는 살포 방식이다. 사람이 분무기를 들고 시설 내부를 이동하며 농약을 뿌리는 기존 방식과 비교해 작업시간을 줄이고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촌 현장에서는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연무·연막 방식의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해당 방식에 맞는 공식적인 농약 등록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일부 농가에서는 줄기와 잎에 직접 살포하는 방식으로 등록된 농약을 연무·연막 방식으로 사용해 온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작물 피해인 약해



농촌진흥청이 시설재배 농가의 농약 살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무·연막 방식의 농약 사용을 제도화한다.

발생 여부와 농약 잔류, 작업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했다.

앞서 지난 5월 국립농업과학원 성제훈 원장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재배 농가를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후 민간 전문가팀을

구성해 연무·연막 농약의 시험방법과 등록 기준을 논의했다. 현장 명예연구관 간담회와 농약 분야 산업계 협의회도 열어 농업 현장의 요구와 안전성 검토 사항을 함께 살폈다.

농촌진흥청은 마련된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개발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 등급 획득

전북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았다. 2018년 이후 8년 만에 '나' 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지방공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지방공사·공단·직영기업 등 26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전북개발공사는 그동안 도내 시·군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지역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특히 부채비율을 준수하면서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AI 기반 업무자동화를 도입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점도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오상근 기자

“조달행정 실질적 변화 만들 것”

김종화 제36대 전북지방조달청장 취임… 첫 여성 청장

김종화 제36대 전북지방조달청장(사진)이 지난 21일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전북지방조달청 개청 이래 최초의 여성 청장이다.

전주 출신인 김 청장은 1993년 공직에 입문한 뒤 조달청 자재장비과와 소평물구매과, 조달교육원, 국유재산기획과와 운영지원과 등을 거쳤다.

이어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장, 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조달청 해외물자과장과 공정평가관리팀장 등을 역임하며 품질관리과 계약·평가업무 등 조달행정 전반에 걸쳐 경험을 쌓았다.

김 청장은 전주 유일여고를 졸업하고 1991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장을 지냈으며, 2023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과 조달청 해외물자과장을 맡았다. 이후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조달청 공정평가관리팀장으로 근무했다. 김 청장은 취임 후 지역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조

달행정을 강조했다.

그는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도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공공조달시장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먼저 찾아가겠다”며 “내부 직원들과도 격의 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지역 기업과 도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조달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1969년 전주에서 태어나 1993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21일부터 제36대 전북지방조달청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후보자 모집

원재료·에너지 비용 선제적 연동 등 모범사례 발굴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우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후보자를 8월 24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원재료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함께 분담하고,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선제적으로 체결·이행하는 등 상생 문화를 확산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수탁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 추진 실적과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정착에 기여한 성과가 우수한 기업이다.

평가에서는 연동계약 체결 비율과 연동 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 수, 납품대금 조정 실적 등이 주요 기준으로 반영된다.

특히 중동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선제적으로 인상하거나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상생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기업은 심사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포상 규모는 중기부 장관 표창 10점이다.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인 참여와 산업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2027년 1월 1일부터 1년 또는 2년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면제, 2026년 공정거래협약 하도급 분야 이행평가 가점 2점, 상생협력법상 벌점 2점 감점 및 과태료 최대 50% 감점 등이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다. 포상 신청서와 공적조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 후보자를 확정된 뒤 11월 열릴 예정인 '2026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사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 내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